농촌관광 코로나 여파 지속…활성화 전략 마련 시급

일반관광 엔데믹 이전 수준 회복 불구 농촌관광은 절반 수준에 그쳐
지역특화 관광자원 발굴·정책·인프라 지원 등 대응체계 구축 필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쇠퇴한 농촌관광을 활성화 시킬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전체 국내 일반관광 피해보다도 농촌관광의 피해가 컸고, 현재까지 회복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 관광자원 발굴, 워케이션 등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지원 등 구체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지역단위 농촌관광 산업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농촌관광이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농촌관광 방문 횟수는 2018년 대비 41.4%, 농촌 지출 총액도 39.5%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내 일반관광의 방문 횟수와 지출 총액이 각각 64.8%, 53.2%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농촌관광 쇠퇴의 정도가 컸다.

대폭 위축된 농촌관광은 엔데믹 이후에도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국내 일반관광은 2022년 정부의 코로나 엔데믹 선언 전부터 방문 및 지출 감소폭을 일정 수준 회복했고, 2023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완전 회복에 성공했다.

반면 농촌관광은 엔데믹 2년차인 지난해까지도 방문 횟수와 지출 총액이 2018년과 비교해 56.3%, 58.3% 수준에 그쳤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광선 KREI 연구위원과 나현수 정책연구원은 "농촌관광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여파를 더 크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 때 회복하지 못하는 등 취약성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동안 농촌관광은 스스로 시대에 맞춰 변화하지 못했고, 인구·사회·경제적 흐름에 따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농촌관광이 더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다"며 "이를 위해 개별관광 공급 주체 역량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 주체 간 협력, 지역 관광사업 체계 구축 등 지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 트렌드 자체가 소규모·일상화 등의 방향으로 바뀐 만큼 농촌관광 역시 기존의 농사체험 또는 대량관광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 강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지역단위 농촌관광 산업체계 구축 방안으로 곡성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미실란의 사례를 들었다. 미실란은 폐교를 활용해 생태책방, 연구시설, 쌀 품종 전시실 등을 갖췄고 이 외에도 시설 신축을 통해 생산공장, 카페, 문화·교육 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농촌 시설을 활용해 지역농업, 농촌산업, 농촌 일자리, 농촌 문화 등의 영역과 연계한 농촌관광 강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농촌관광은 해당 지역만이 가진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예비계획을 공모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단위 농촌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각종 인프라 지원, 각 농촌지역 소재 관련 주체들 간 분업 등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진군의 '푸소'가 2005년부터 농촌관광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사례처럼 농촌관광에 전문화된 중간지원 조직을 육성하는 '지역단위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 육성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한국정책대상 우수 정책상
외식업체 비용절감 정책 호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5일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제14회 한국정책대상'에서 우수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정책대상은 매년 정책의 창의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공공기관의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는 aT를 포함한 15개 기관이 선정됐다.

aT는 외식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배달수수료 절감을 위한 공공배달앱 통합포털 구축, 빅데이터 기반 외식업 경영전략 분석, 배달앱 연계 외식업체 알뜰 식재료 구매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외식업계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aT는 지역별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 모은 '공공배달앱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전년 대비 283.2% 증가한 2281만건을 기록했으며, 외식업주의 배달 수수료 절감, 소비자 외식비용 부담 완화 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문표 aT 사장은 "스마트화와 온라인 배달 확산 등으로 외식업계는 디지털 기술 활용 여부에 따라 경영 성과에 큰 차이가 나고 있다"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aT의 맞춤형 서비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
개인 부문 6명 등 수상

농촌진흥청은 "'2025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를 열고, 올 한 해 농촌지도 분야에서 성과를 낸 지방 공직자 및 농촌진흥기관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는 지역 농업 현장에서 기술보급, 컨설팅,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 혁신에 앞장 선 인물·조직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회에서는 개인부문에서 6명이 수상했다. 대상은 최수정 구미시농업기술센터 팀장이 선정됐다. 샤인머스켓 농가의 안정적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수출 작목회 조직, 공동출하 체계 마련 등 지역 농업인의 소득 기반 확충에 기여한 점과 더불어 연간 90회에 달하는 재배기술 교육, 전문 컨설팅 제공 등 현장 기술 보급 활동 성과가 인정받은 결과다.

최우수상에는 김은경(진천군농업기술센터), 신경선(횡성군농업기술센터), 김봉순(안성시농업기술센터), 이은애(홍성군농업기술센터), 서병희(경주시농업기술센터) 팀장 등 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지역 특성에 맞춘 기술 보급, 품목별 전문가 양성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기관 평가에서는 농업기술원 분야로 경북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어 충남도와 제주도가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산시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서울이 우수상, 광주시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최우수 기관에는 화성시, 홍천군, 청주시, 홍성군, 정읍시, 함평군, 경주시, 함양군 등 8곳이 이름을 올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
선정 지구 5년간 100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7일 "농촌 마을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구에는 5년간 평균 100억원이 지원되며,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21년부터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간 악취 등으로 힘들어했던 경북 상주시 덕산지구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폐축사 등을 철거하고, 해당 공간을 시니어 놀이터와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또 충북 증평군 화성지구는 지난 30년간 방치돼 각종 오염물질 발생, 붕괴위험 등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았지만, 사업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철거를 확정했다. 해당 부지 역시 철거를 마친 뒤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등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업이 매년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농촌 정주 여건 개선 효과도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신규 대상지 선정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공모는 농촌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 2월 27일까지 사업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신규 지구는 공간정비 시급성 및 필요성, 공간재생 파급효과, 공간계획 연계성, 주민·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지역 추진의지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2026년 3월말께 15개 내외의 지구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농업시설 현황 담은 농업생산기반정비 통계연보 발간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우리나라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24년 농업생산기반정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농업생산기반정비 통계연보는 지난 1955년부터 발간되고 있는 국가 승인 통계로, 올해로 발간 70회째를 맞이했다. 연보에는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농업용 수리 시설물 현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집행실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자료는 농업생산기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농업 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계 자료는 공사가 97개 지사와 사업단, 전국 180개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조사하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경지면적 자료와 연계해 작성된다. /장윤영 기자 zzang@

"정부 보급종 벼 신청 하세요"
국립종자원 내년 1월까지 접수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내년 1월 30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벼 농사에 필요한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9일까지는 기본신청기간으로 광주·전남지역 시·군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기간에는 보급종 잔량이 남아 있을 경우 지역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벼 정부 보급종은 5개 품종 2397ｔ으로, 새청무 2184ｔ, 백옥찰 56ｔ, 조명 1호 27ｔ, 영호진미 50ｔ, 동진찰 80ｔ이다.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된다.

정부 보급종 공급은 신청한 지역농협을 통해 내년 1월 12일부터 3월31일까지 이뤄진다. 공급가격은 내년 1월 초에 신청기관 또는 지역농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